※ 2021년 1월 28일 12시 00분 부터 보도 가능
(인터넷·온라인·통신 등 포함)

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21. 1.

농림축산식품부

목 차

Ⅰ. 4년 추진성과와 평가 ····· 1

Ⅱ.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····· 6

Ⅲ. 2021년 핵심 추진과제 ····· 8

1.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····· 8
2.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····· 11
3.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····· 14
4.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·농촌의 포용성 제고 ····· 17
5. 농업·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····· 20

Ⅳ. 2021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····· 23

【별첨1】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
【별첨2】 4년간 성과/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

Ⅰ. 4년 추진성과와 평가

1. 주요 정책성과

①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도화

□ 추진실적

○ (**제도 안착**) 농업인·전문가 등의 **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**하여 **공익직불제 도입·시행**

* 「공익직불법」 제정('19.12), 세부시행방안 마련('20.4) 및 시행('20.5)

- 농지 형상·기능 유지, 농약·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**농업인**의 **공익적 역할**을 **제도화**하고, 영세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**소농직불 도입**

* ①기본 직불 : 소농직불(0.5ha 이하 농가 120만원/年) + 면적직불(구간별 100~205만원/ha)
②선택 직불 : 기존 친환경·경관보전·논활용직불제(개편전 논이모작직불) 포함

○ (**재원 확보**) 기존 직불금 예산을 통·폐합, **공익직불 예산 2.4조원**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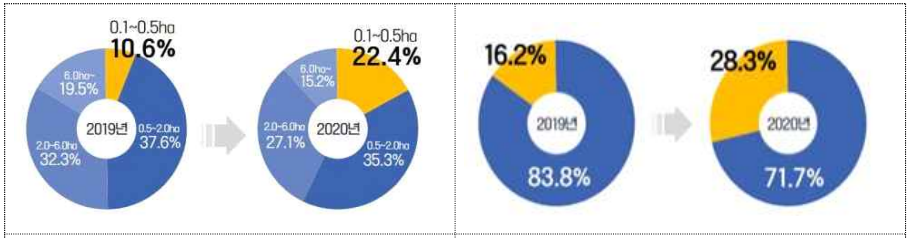
- 실경작 여부·농외소득 등 **자격 요건 검증**(~'20.11월)을 통해 **부정수급**을 **선제적**으로 **차단**(요건 미충족 32천ha, 26천 건 제외)

□ 정책효과

○ 직불제를 쌀 소득안정에서 환경·생태 보전 등 **공익적 기능 중심**으로 **개편**하여 **농업·농촌 역할**에 대한 **국민적 인식 전환** 계기 마련

○ 전체 직불금 중 **0.5ha 미만 농업인**(농가) **수령액 비중**이 제도 **개편전 대비 11.8%p 증가**(10.6% → 22.4), 중소농 소득안정에 기여

○ **밭**에 지급되는 **직불금 비중**(16.2% → 28.3)이 **증가**하여 **논·밭간 형평성 제고** 및 밭작물 육성 기반 확충



소규모 농가 지급 비중 | 논·밭 직불금 비중

② 농산물 가격안정과 재해안전망 강화로 농가소득 제고

□ 추진실적

○ (**농가 경영안정**) 로컬푸드·온라인 등 **직거래 활성화***로 **중소농 판로**를 **확충**하고, 재해복구비·보험 등 **재해 안전망 강화****

* 공공급식 로컬푸드 비중('18: 27.3% → '20: 43.1), 로컬푸드 직매장('18: 229개 → '20: 554)
** 재해복구비 현실화율(지원단가/실거래가) 인상('17: 66% → '20: 83),
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('17: 30.1% → '20: 45.2)

○ (**쌀**)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('18~'20)을 통한 **적정 재배면적 확보**와 함께, 쌀 시장 안정을 위한 **수급 안정 장치 제도화***(양곡관리법령 개정, '20.7)

* 매년 10.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, 공공비축미 매입·판매 기준 마련

○ (**채소류**) **관측방식 개선**(전화조사 → 실측)('20~), **마늘·양파 의무자조금** 결성('20.7) 등 생산자 중심의 **자율적 수급조절체계** 구축

- 관측정보를 기반으로 **채소가격안정제*** 등 **선제적 수급조절** 시행

* 무·배추·마늘·양파·고추 출하물량의 50%에 수급조절의무를 부과하고, 평년가격의 80% 보장

□ 정책효과

○ (**농가소득**) 주요품목의 가격 안정과 재해보험·직불금 등 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**'18년부터 농가소득 4천만원대** 진입

* 농가 소득 : ('17) 38,239천원 → **('18) 42,066** → **('19) 41,182** → **('20p) 43,098**(KREI 농업전망)

○ (**쌀 가격**)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**20년 전 수준**('96년, 34천원/20kg)까지 **하락했던 쌀 가격 회복**



* 수확기 쌀값 : **('16) 32,452원/20kg** → ('17) 38,303 → ('18) 47,642→ ('19) 47,491 → ('20) 54,121

○ (**마늘·양파 가격**) 관측정보 제공, 수급조절 등 **선제적 대응**으로 **마늘·양파 가격**의 연례적인 **급등락 방지**

* 깐마늘: ('19.8) 3,992원/kg(평년비 36.5%↓) → ('20.8) 6,826(10.1%↑)
양 파: ('19.8) 502원/kg(평년비 48.1%↓) → ('20.8) 998(3.2%↑)

3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적극적인 비대면 홍보로 농식품 수출 확대

□ 추진실적

○ (**시장 다변화**) 일본·중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**신남방**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**유망품목 육성** 및 **검역 장벽 해소** 추진

- 수출 전 농약검사 확대 등 **품질·안전성 관리** 강화, **저온 유통체계*** 구축으로 **딸기·포도**를 스타품목으로 육성하고, **온라인 전용 판매관** 등 확충

* 수출 전문생산단지 예냉 시설 확충, 선도유지 기술 적용 물류 체계 구축 등

- 최근 **3년간 파프리카***(중국) 등 **총 53건**의 검역장벽을 해소하여 **수출시장 다변화** 계기 마련

*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농식품 수출에 처음으로 비대면 영상검역 방식 도입

○ (**코로나19 위기 대응**) **비대면 방식**으로 마케팅 전환, **물류 개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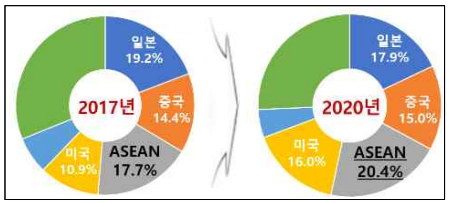
- **해외 온라인몰 입점**, **화상 수출상담회**(17회), **온라인 박람회** 등 비대면 수출홍보 방식으로 전환

- 항공운송 차질에 대응, **신선기술**을 **적용한 선박 수출**을 최초 도입하고, **전세기**를 통한 수출도 지원(딸기)

□ 정책효과

○ (**수출 증가**)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애로, 세계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도 농식품 수출은 **전년 대비 7.7%** 증가('20, 75.7억불)

<국가·지역별 수출 비중>



- 유망시장이던 **신남방**이 **최대 수출시장**으로 부상('17: 17.7% → '20: 20.4)

○ (**농가소득 제고**) **김치, 포도** 등 수출유망 **신선 농산물**의 **수출 확대**로 수출농가 소득제고에 기여

* (김치) 145백만불('19년 대비 37.6%↑), (포도) 31백만불('19년 대비 32.4%↑)

4 선제적 방역 추진으로 가축질병 발생·확산 최소화

□ 추진실적

○ (**아프리카돼지열병**) 오염원 제거, 확산차단, 농장방역 등 **초동 대응**에 **역점**

- 발생지역 **신속 수매·살처분**, 접경지역 **집중소독**으로 **오염원 제거**

- 접경지역을 4대 권역(경기·강원 남·북부)으로 묶고 **권역간 사료·분뇨·가축 이동**을 **통제**하여 확산 차단

- 농장 방역상황을 지속 점검·보완하고, **접경지역**을 **중점방역관리지구**로 **지정**('20.11)하여 농가의 방역시설 기준 강화

○ (**조류인플루엔자**) 오염지역 격리·소독, 농장방역, 수평전파 차단 등 추진

- 농장 진입로, 주변 소하천·저수지, 철새도래지 **매일 소독**, 철새도래지에 **축산차량·일반인 출입통제 강화**('20.9~)

- 농장에 **방역수칙 매일 안내**, **현장 점검** 및 **미흡사항 보완**

-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**차량·운전자 소독 의무화**('20.11), 농장 내 **차량 진입 제한** 및 **분뇨차량 시·도 이동 제한**('20.12) 등 행정명령 발령

○ (**구제역**) 농가의 백신접종을 적극 유도하고 가축분뇨 관리 강화

- 구제역 발생위험이 큰 **서해안·접경지역**에 **백신 보강접종 실시**

- **위험시기**인 동절기 **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** 조치

□ 정책효과

○ (**아프리카돼지열병**) 국내 최초 발생(14건, '19.9~10월) 이후 **단기간 내 확산**을 억제하였고, 금년 **재발생**('20.10.8~9) 상황도 2건으로 **조기 차단**

○ (**조류인플루엔자**) **'20년 전세계 대유행*** 등 **악조건**에도 **수평전파 없이 산발적 발생**으로 관리



* (유럽) '20년 발생 건수 전년 대비 **가금농장 74배↑**, **야생조류 292배↑**
(일본) 43개 현 중 14개 현 가금농장에서 39건 발생('10년 이래로 최다 발생 중)

○ (**구제역**) **'19.1월 3건** 발생, 4일 만에 확산 차단 후 **미발생**

5 스마트팜 확산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

□ 추진실적

○ (**스마트팜 보급**) 스마트원예단지, 축산ICT 단지 조성 등 기존 **원예시설·축사**의 **현대화** 및 **스마트화*** 지원

* 스마트팜(시설원예/축사) : ('17) 4,010ha/801호 → ('20p) 5,948/3,169

○ (**스마트팜 혁신밸리**) **스마트농업 기술·인력** 등 **확산 거점**으로 활용하기 위해 **전국 4곳**에 '**스마트팜 혁신밸리**' 조성 추진 중('18~)

* 1차 지역(상주, 김제)은 '21.상반기, 2차 지역(밀양, 고흥)은 '21.하반기 완공 예정

- 우선 운영 중인 **청년창업 보육센터**를 통해 청년들('18~, 372명)에게 스마트팜 이론 및 실습 교육, 취·창업 지원

□ 정책효과

○ 스마트 농업의 효과*에 대한 농업인들의 **인식을 전환****시키고, 노지·축산, 수출 등 **농업 전반**의 **스마트화**를 **촉진**하는 계기 마련

* 스마트팜 도입 전 대비 **생산량 32.1%↑**, **노동시간 13.8%↓**, **병해충 6.2%↓**

** **농업인의 59.5%**는 향후 **스마트팜 도입 의향**이 있는 것으로 조사('20.5, KREI)

2. 미흡한 점

□ **(현안 해결)** 수급불안 등 **고질적 문제** 해결에 집중하여 대응체계 개편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이를 안착시킬 **제도 정비**와 **기반 조성**은 미흡

○ 사전예방 중심의 **방역시스템** 제도화, **안정적인 먹거리 기반** 확충, 유통혁신을 위한 **자조금·도매시장 제도 개선** 등 집행력 제고 필요

□ **(구조 전환)** **코로나19**가 촉발한 **시대적 변화 대응**과 **탄소중립 사회 이행**을 위한 농업·농촌 분야 **과제 발굴**과 **시책화 미흡**

○ 농업의 **디지털 전환**, **농촌 재생** 등 포용성 강화, **기후변화 대응력 제고** 등 중장기 **농정 구조전환**을 위한 **로드맵** 마련 필요

II.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. 업무추진 여건

◇ '**한국판 뉴딜**'을 포함한 **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**가 구체화되고, '**2050 탄소중립**' 선언으로 **분야별 탄소 감축**도 본격화

⇨ **경제·사회 구조전환 가속화 과정에서 농업·농촌의 역할 확대 요구**

□ **농업계**는 코로나19로 나타난 각국의 **식량위기**(수출제한, 사재기 등) 상황을 계기로 '**안보산업**'으로서 **농업의 역할과 위상 제고 요구**

○ 농업인들은 **기상이변·재해**에 따른 농가 경영 위협, 농촌의 열악한 **주거·생활 여건** 등을 **개선**해야 할 문제로 인식

* 농업인의 47.8%가 기상이변과 재해를 가장 큰 경영 위협으로 인식, 38.7%가 열악한 주거·생활 여건을 농촌 생활의 불만족 이유로 응답('20.12, KREI)

○ **디지털 전환**과 **저밀도사회**에 대한 관심을 **농업·농촌**의 **취약한 부분**을 **개선**하는 기회로 활용 기대

□ **국민들**은 **안전한 먹거리**의 **안정적 공급**, **환경 보전**과 **지역 활성화** 등을 농업·농촌 분야의 중요한 기능*으로 기대

*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 공급(56%), 식품 안전성(51) 및 환경보전(26)을 중요시('20.12, KREI)

○ **온실가스 감축**으로 국가 **탄소중립 목표 달성**에 **기여**하고, 농업·농촌의 **공익적 역할**에 대한 **국민적 기대에 부응** 필요

*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(709백만톤)의 2.9% 수준(20.4백만톤)

○ 코로나19로 **귀농귀촌 의향 증가**('19: 34.6% → '20: 41.4) 추세를 감안, **농식품 분야**에서 다양한 **기회요인** 제공 필요

2. 업무추진 방향

◇ 사람과 환경 중심 **농정 성과**를 **제도적으로 안착**시키고, **구조변화** 과정에서 **농업·농촌**의 **포용**, **혁신**과 **지속가능성 제고**

○ 금년도 농업분야는 △고질적 농정현안의 **제도적 해결**, △**구조변화 선제 대응**에 주안점을 두어 5대 과제 중점 추진

□ 농산물 **수급불안**, **가축질병** 등 고질적 농정문제 해결을 통해 **민생안정**, **경제활력 회복**에 주력

① **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기반** 확충 및 생산자 중심의 **자율적인 수급안정 체계 정착***

* 정부(정확한 정보 제공, 수급조절 지원)와 생산자(자발적 수급 조절)간 협력 제도화

② 농가·축산업계의 **책임성 강화** 및 **사전예방** 중심의 **선제적·상시적 방역체계 제도화***를 통한 가축질병 불안 해소

* 일반적·포괄적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해 온 방역조치를 개별 규정으로 구체화·명문화

□ **디지털화·탄소중립** 등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**농업 구조**를 **전환**하고, **농촌**은 **한국판 뉴딜**의 **핵심 공간***으로 재생

* "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"(제25회 농업인의 날 대통령 기념사)

③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생산·유통·수출 등 **농업 전반**의 **디지털화**를 촉진함으로써 **새로운 성장동력** 확보

④ 도시민의 **귀농귀촌 수요**에 대비하여 인프라 확충 등 **농촌재생**을 추진하고,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**농업·농촌**의 **포용성 확대**

⑤ **탄소중립**(Net-Zero) 실현을 위한 **실천계획**을 수립·시행하고, 자연재해 등 **기후변화 적응력** 제고

Ⅲ. 2021년 핵심 추진과제

①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

1. 관련 현황

□ **[식량 공급] 밭·식량작물 공동경영체** 육성, 식량작물 **수매비축** 등 주요 곡물 **자급기반 확충**을 위한 정책 추진

* 밭·식량작물 공동경영체는 67개 시·군, 147개 운영 중('20.12 기준)

○ 쌀을 제외한 밀·콩 등 **주요 곡물**의 **자급률**은 여전히 **낮은 수준**

* 식량자급률('19) : 쌀 92.1%, **밀 0.7%**, **콩 26.7%**, 보리 47.7% 옥수수 3.5%

⇨ 포스트코로나 시대 **사회안전망**으로서 **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**을 구축하기 위한 **세부 실천계획** 추진 필요

□ **[수급 안정]**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**노지채소류** 중심으로 **관측방식**을 **개선**하고, **의무자조금 단체 확대** 등 자율적 수급조절 기반 구축

○ (**관측방식 개선**) 정성적 방식의 농업관측을 GPS, 전자저울 등을 이용한 **실측방식**으로 전환('20.1)

- 실측 조사를 통해 **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관측정보를 제공***하고, **선제적 수급 대책** 실시(마늘 수급대책 '19: 4월말 → '20: 3월초)

* 마늘 재배면적 발표 : ('19) 3월→ ('20) 1월(작황 실측 결과 월 2회 이상 제공)

○ (**의무자조금**) **노지채소류 최초**로 **마늘·양파 의무자조금 단체**를 설립('20.7)하고, 참여 범위를 **전체 농가**로 확대('20.11)

⇨ **의무자조금 단체**가 자율적 **수급조절 역할을 수행**할 수 있도록 **제도화** 및 **기능 강화** 요구

2. 추진 계획

◇ (**목표**) 식량안보 기반 확충 및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정착으로 **먹거리·농가경제 불안요인 최소화**

① **우량 농지 확보** 및 **주요 곡물 자급기반 확충** 등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고, **식량위기** 대비 **대응역량** 제고

② **정확한 관측정보** 제공, **자조금**의 **수급조절기능 활성화**, **유통체계 개선** 등으로 생산자 중심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강화

□ **[식량안보 기반]** 안정적 먹거리 보장을 위한 **농지 확보** 및 **주요 곡물**의 **자급** 확대 추진

○ (**농지 관리**) **농지원부 정비**를 **마무리**(~12월)하고, 소유자 주소지에서 **농지 소재지**로 **관할 행정청**을 **변경**하여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('21~'22)

- **임대차시 농지원부 신고의무**, **상속농지**의 농업목적외 이용시 **처분의무 부과**, 대규모 농지전용시 심사 강화 등 **우량농지 보전·활용** 강화

○ (**밀·콩 자급**) 밀·콩의 국내 **생산·유통·소비** 등 **인프라 구축**

- 전문 **생산단지**와 **저장·처리시설**을 확충*하고, 고(高)순도 보급종 지원·계약재배·정부 매입 등 **생산단지 집중 지원**

* 밀 전문 생산단지('20: 27개소, 2,348ha → '21: 32, 5,000), 저장시설(신규 2개)
논콩 재배단지('20: 44개소 → '21: 100), 콩 종합처리장('20: 10개 → '21: 14)

- 급식 등 국산 밀 **대량 수요처 발굴**(1~9월)과 함께, **정부 비축 콩 구매·사용·재고 확인** 및 **부정유통 관리 강화***로 국산 콩 소비 여건 조성

* 정부 비축 콩 수급관리시스템 구축('21~'23)

□ **[위기 대응]** 비상시 대비 국산 밀·콩 등 **비축량***을 **단계적**으로 **확대**하고, **국제곡물 동향** 상시 **모니터링** 및 **위기경보** 체계 가동

* 밀/콩 비축량 목표 : ('21) 10천톤 / 25천톤 → ('23) 20 / 25 → ('25) 30 / 30

○ **국제연합**(UN) '**푸드시스템 정상회의***'(9월) 등 식량안보 및 먹거리 안정에 관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, 협력 강화

* 식량접근성, 지속가능한 소비, 환경친화적 생산, 평등한 배분, 위기대응 등 식량안보 논의

□ **[수급안정 체계]** **정확한 관측정보**에 기반한 **생산자** 중심의 **자율적 수급조절** 체계 안착

○ (**관측 고도화**) 수급조절 지원을 위한 **실측** 및 **예측 정보 정확도 향상**

- 농가정보 현행화 및 표본 확대 등을 통해 **관측표본**의 **정합성**을 **개선**하고, 실측 결과 검증을 위해 **드론 활용** 추진(1월)

- 관측 데이터 **개방**, 예측모형 **경진대회** 정례화 등 다양한 **모형 검증**을 통해 **수급·가격 예측모형 개발**('22)

* 데이터 개방 이후 관심도('20.7~'21.1.11): 접속자 211천명, 데이터 다운로드 55천건

○ (**자조금 기능 강화**) 마늘·양파 등 의무자조금단체 중심으로 **자발적 협약 체결** 등 **선제적 수급조절 기능 제도화**

- **경작신고**(의무화, 2월) 면적에 따라 **자조금을 거출**하고, **수급불안 예측**시 재배면적 조절 등 **사전 대응 추진**

- 자조금 기능을 홍보·소비 촉진 중심에서 **생산·유통** 등 **자율수급 조절**로 **전환**(3월)

○ (**유통체계 개선**)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 역할·기능 재정립을 위해 「**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**」 마련(6월)

3. 기대 효과

□ **[식량안보]** 밀·콩 등 주요곡물 **자급률 제고** 및 **위기 대응역량 개선**

□ **[수급]** 주요 채소류의 의무자조금 도입·기능 강화로 **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시스템 정착**, **농가 소득안정**에 기여

밀 전문생산단지(누계)		**밀·콩 비축량**(목표)		**의무자조금 도입 품목**(누적)	
'20	**'21**	**'21**	**'25**	**'20**	**'21**
2,834ha (27개소) ▸	**5,000 (32)**	밀 10천톤 콩 25천톤 ▸	**밀 30 콩 30**	14개 ▸	**16**

②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

1. 관련 현황

□ **[입지 기준]** 철새도래지 인근, 농지에 둘러싸인 축사 등 **방역 취약지역**에 **많은 농장 입지**로 **차단 방역**에 어려움

○ 대부분의 **가금농장**이 철새 이동경로인 **서해안 지역에 밀집**되어 철새를 통한 **바이러스 유입 위험**에 노출

* 전국 대비 서해안 지역(경기·충청·전라) 분포: (닭) 74%, (오리) 89%

⇨ **방역에 취약한 지역**은 **가금농장 입지**를 **제한**하는 등의 조치 검토

□ **[시설 기준 · 준수사항]** 발생 위험지역을 **중점방역관리지구**로 지정하여 **시설기준 강화**, 방역실태 점검·보완 및 **'4단계 소독요령***' 집중 홍보

* ①주변 생석회 도포, ②내부 매일 청소·소독, ③축사 출입시 장화 교체·손소독, ④축사 매일 소독

○ 다수의 농장시설이 **방역에 취약***하고, **방역수칙 미 준수 사례**도 확인

* 오리 사육시설이 비닐하우스인 경우가 76% 차지

○ **차량·사람**의 **잦은 농장출입**에 의한 **전파 가능성***도 높은 상황

* AI 발생원인('14년 이후 역학조사): 출입차량 35% > 축주·종사자 24 > 야생조수 17

⇨ 농가의 **사육시설·준수사항 기준을 강화**하여 **질병발생 사전예방** 필요

□ **[방역체계]** 가축전염병 **발생 위험 시기**(AI·구제역: 10~2월 등) 및 지역에 대해 **오염지역 소독**, **농장 점검·보완** 등 추진 중

○ 축산관계자의 방역에 대한 **의식**이 **부족**하고, **농장방역** 실태 점검을 통한 **효율적 관리 미흡**

⇨ 축산관계자의 **책임성 제고** 및 **농장 방역 실태·이력 관리**를 통한 방역체계 개선 시급

2. 추진 계획

◇ (**목표**) 사후대응 방식 탈피, **사전예방 중심 방역시스템 제도화**

① 방역에 취약한 곳의 **입지기준 강화** 및 **사육환경 근본개선**

②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**농장 차단 방역시설 강화**

③ 축산관계자의 **방역책임성 제고** 및 **방역지원 체계 개선**

□ **[입지 기준] 발생 위험**이 높은 지역은 **축산농장 입지기준 강화**

○ (**입지 제한**)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**중점방역관리지구**로 **지정**하고, **가금사육업**의 **신규허가 금지**(축산법 시행령, 상반기)

○ (**계획 입지**) **농촌공간계획** 수립 시 **친환경축산지구**(가칭) 지정을 통해 축사의 계획 입지 유도

□ **[시설 기준] 농가**별 강화된 **방역시설 기준 적용** 및 **사각지대 해소**

○ (**가금**) **AI 중점방역관리지구** 내 **가금농가**는 강화된 방역시설* **의무화**

* ①외부·②내부 울타리, ③방역실, ④전실, ⑤방조망, ⑥폐사체 보관시설, ⑦물품 반입 시설

- **비닐하우스** 등 방역에 취약한 **오리 사육시설 허가기준 강화** (축산법 시행령, 상반기)

○ (**양돈**) **전국 모든 양돈농장**에 강화된 **8대 방역시설*** **설치 단계적** 적용

* ①외부 울타리, ②방조·방충망, ③폐사체 보관시설, ④내부 울타리, ⑤입·출하대, ⑥방역실, ⑦전실, ⑧물품 반입시설

○ (**사각지대 최소화**) 소독·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**소규모**($50m^2$ 이하)·**기타가축**(6종*) 농가도 소독·방역시설 **기준 마련**(가축전염병예방법, 8월)

* 토종닭, 칠면조, 거위, 타조, 메추리, 꿩, 기러기

□ **[준수사항] 농장, 축산시설, 차량** 등의 방역수칙 **준수사항 강화**

○ (**농장**) **농장 4단계 소독** 및 전실 내 **CCTV 설치**를 **의무화**하고, 축사 출입시 **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**

○ (**시설·차량**) 도축장 등 **축산시설**과 **소속 차량**의 **방역기준 마련**(상반기)

○ (**특별방역대책기간**) 축산차량의 농장·시설 출입 전 소독, 가금 방사사육 및 전통시장 산 닭·오리 유통 금지, 알 운반차량 1일 1농장 방문 등 의무화

□ **[방역체계 개선]** 축산 관계자의 **자발적 방역 노력**을 강화하고, 농가 방역지원 체계 개선

○ (**질병관리등급제**) 방역 수준, 입지, 주변 여건 등 **평가 기준·방법**을 **개선**(8월)하고, 등급별 **패널티·인센티브** 적용 검토

○ (**계열화 사업자**) **시설 기준 미충족 농가**와의 **계약**을 **제한**하고, 미충족 농가와 계약한 경우 계열화 사업자에게 패널티 부과

- **비계열 가금농장** 중 중요 **방역시설·소독설비 미흡농장**은 시설 보완 시까지 **사육제한** 추진

○ (**사육관리업**) **민간**의 **전문 역량**을 살리면서 자체적 방역 관리가 어려운 농가의 방역수준 제고를 위해 **사육관리업*** **신설**

* 농장청소·소독, 가축 사양관리, 가축질병 관리, 가금 상하차 및 백신접종 등

○ (**농가 정보 통합관리**) 전국 **축산농가 정보**를 **데이터베이스**(DB)화 하여 농가 **방역이력** 및 **등급** 등 관리 강화(7월)

* 매년 농가의 시설·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D/B화, 질병관리 등급제에 활용

3. 기대 효과

□ 방역지원 체계 개선, 농가의 자체적인 방역 역량 제고, 위험지역 농가의 방역시설 개선 등을 통해 **가축질병 예방**에 기여

○ 방역조치, 살처분 등 추진에 따른 **사회적 비용 최소화**

3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

1. 관련 현황

□ **[스마트 농업] 혁신밸리 조성**('18~), **노지 스마트팜 실증연구 착수**('20~) 등 스마트농업 **확산 기반** 마련

○ 혁신밸리 내 **보육센터 수료생 첫 배출***('20.6월, 45명), 신규선발 확대('19: 104명 → '20: 208) 등 **스마트팜 청년인력 양성**

* 45명 중 38명은 창농, 4명은 농업법인 취업 등 농업분야 청년인력 유입 성과

⇨ 4곳의 혁신밸리 **조성 공사**가 금년 중 **순차적**으로 **마무리**됨에 따라 본격 가동 추진

□ **[온라인 유통]** 양파('20.5~), 마늘('20.8~) **온라인 도매거래 시범 추진**으로 농산물 비대면 유통혁신 **가능성 확인***





* 양파·마늘의 온라인 거래물량이 32개 도매시장 물량과 비교시 3~4번째로 많은 수준

○ 온라인 도매거래 방식 도입으로 **유통 효율성 개선**, 출하 **선택권 확대** 등 **생산자**와 **소비자 후생 증가** 기대

* (출하자) 양파 수취가 77원/kg 상승, (소비자) 구매가 62원 인하(추정)

⇨ **다양한 주체**의 **거래참여 부족**, 소규모 거래시 **물류비 부담**, **농가 직접적 혜택 부족** 등은 보완 과제

□ **[온라인 수출]** 온라인 상담회·판로개척 등 **비대면 수출지원**을 확대하여 코로나19 등에 따른 **수출·유통 환경 변화**에 신속히 대응

⇨ 중개인을 거치지 않는 **직접 수출 비중**이 낮고*, **오프라인 매장 수출 의존도**가 높은 **농식품 수출구조 개선** 필요

* 온라인 직수출 가능 농식품업체는 '19년 기준 10개(aT등록 수출업체 1,931개 중 0.05%)

2. 추진 계획

◇ (목표) **생산·유통·수출** 등 농식품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**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**의 **성장동력 확보**

① **스마트팜 혁신밸리**를 적기에 **완공·가동**하고, **청년농 본격 육성, 기술개발** 및 **데이터** 수집·활용 촉진을 통해 **스마트 농업 확산**

② **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, 물류체계 개선방안** 마련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촉진

③ 해외 현지 **온라인 유통 플랫폼** 등을 통한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

□ **(스마트 농업) 4개 혁신밸리 운영체계 구축**(~4월, 상주·김제) 및 **활성화 지원***, 데이터·수출 등 **스마트팜 산업생태계** 구축 지원

* 스마트농업 인력양성, 빅데이터, 거버넌스, 표준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(12월)

○ (**혁신밸리**) 혁신밸리 내 **보육센터·임대온실·실증단지**를 **활용**하여 **청년농**을 본격 육성(7월~)하고, **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지원**

- **보육센터 수료생** 등 청년농에게 혁신밸리 **임대온실 지원, 비축농지 지원한도 확대**(1ha → 2) 등 창업 지원 강화

- **스마트팜 생산성 향상, 인공지능 기반 무인·자동화**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해 혁신밸리 **실증단지**와 **스마트팜 연구개발*** **연계** 추진

* 스마트팜 원천기술 및 차세대기술 개발을 위한 다부처 협력 연구('21~'27, 3,867억원)

○ (**데이터**) **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**을 구축(7월)하고, **스마트팜 인공지능**(AI) **경진대회 개최**(10월) 등 데이터 활용도 제고

○ (**수출**) 해외 **시범온실 조성**(카자흐, 베트남)과 **스마트팜 공적개발원조**(ODA, 캄보·인니·베트남·필리핀)를 추진하고, **비대면 농기자재 수출** 지원

□ **(디지털 유통 혁신)** 온라인 거래가 **새로운 유통혁신**의 **대안**으로 **자리매김** 할 수 있도록 **기반 마련**

○ (**거래활성화**) **대규모 저장·가공업체, 김치업체** 등의 **참여 유도** 및 **거래방식 다양화**(역경매, 예약구매 등)로 거래 활성화(1월~)

* 화훼('21~), 축산물('22~) 등도 온라인 거래방식 시범 도입 추진

○ (**물류효율화**) 산지 물류시설 현황 및 온라인거래 품목·거래량 분석 등을 통한 **물류체계 개선방안 마련**(6월)

○ (**농가지원**) **산지 공판 기능이 부족한 품목**(남도종 마늘 등)에 대한 **온라인 시범모델 구축**(연구용역, ~5월) 등 농가 지원기능 강화

□ **(온라인 수출)** 기존 홍보·마케팅 외에 **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** 진출, **상시 비대면 수출 플랫폼 운영** 등 수출지원 방식 전환

○ 중국·신남방 등 유망시장 **글로벌 대형 온라인몰** 내 **'한국식품관'** 입점 확대*, **온라인 직접 수출 가능 농식품 기업 100개소** 육성**

* ('20) 중국(티몰) → ('21) 5개소(중국 허마셴셩, 동남아 쇼피 등)

** 다품종·소량 직수출을 위한 물류 지원, 온라인·모바일 마케팅 역량 강화

○ **비대면 수출 상시화**에 대비, 상품 정보 제공과 거래조건 문의 및 견적요청 등이 가능한 **온라인 거래**(B2B) **플랫폼** 구축

3. 기대 효과

□ ①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**신성장동력 확충**, ②농축산물 **비대면 유통 혁신** 촉진, ③**농식품 수출 성장세 지속** 기대

스마트팜 보급 면적		농산물 온라인도매거래 비중		농식품 수출액	
'20	'21	'20	'21	'20	'21
5,948ha ▸	**6,263**	2.5% ▸	**5**	75.7억불 ▸	**81**

④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·농촌의 포용성 제고

1. 관련 현황

□ **(살고싶은 농촌공간 조성)** 코로나19 이후 비대면·저밀도 환경을 선호하는 도시민의 **농촌 이주 증가**가 **예상***

*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귀농·귀촌 의향은 이전(34.6%) 보다 증가한 41.4%('20.12, KREI)

○ 그간, 노후·불량주택 등 **주거여건**을 **개선***하고, **생활SOC 공급**** 및 **농촌형교통모델** 확산(82개 시군) 등 서비스 인프라 확충

* 최근 3년간('18~'20) 빈집 정비 23,260동, 노후·불량주택 정비 18,092호 정비

** 생활SOC 복합센터(누계) : ('17) 369개소 → ('18) 488 → ('19) 589 → ('20) 693

○ 그럼에도 여전히 **농촌**의 **주거환경**, **교육·보육·의료·문화** 등 **각종 인프라**가 **도시에 비해 취약**하여 귀농귀촌에 걸림돌

⇨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에 대비하여 **농촌공간**의 **종합적 정비·개선** 필요

□ **(농업·농촌의 포용성 제고)** **사회적 농장**의 **사회서비스** 제공, 영세농 소득 안정을 위한 **로컬푸드 확산*** 등 포용적 정책 추진

* ①로컬푸드 공급비중('19→'20) : 혁신도시(27.2%→37.1), 군(36.1→43.3), 지자체(25.9→33.1)
②직매장 참여농가 및 소비자 회원 : ('19) 23천명, 136만명 → ('20) 36, 438

○ **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**,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**농식품 바우처** 등 **농식품 지원프로그램** 시범 **도입**

*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('18~),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('20~), 농식품 바우처('20~) 등

○ **코로나19**로 저소득 가구의 식료품 구입이 줄어드는 등 **취약 계층의 식생활**을 **위협**할 **가능성 확대** 우려

* '20.1분기 식료품 및 음료 지출이 월 소득 100만원대 가구는 2.1% 감소하였으나 월 소득 200만원대 이상 가구에서는 4~18% 증가('20.11, KREI)

⇨ 도시와 농촌의 **취약계층, 영세·고령농** 등을 위한 먹거리 지원 강화 등 **농업·농촌의 사회적 역할 확대** 필요

2. 추진 계획

◇ **(목표)** 포스트코로나 시대 귀농귀촌 희망 **도시민**과 **취약계층**에 대한 **농업·농촌**의 **포용성 제고**

① **농촌공간계획**에 기초한 **농촌재생 뉴딜**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

② 체험기회 제공 등 **준비된 귀농귀촌 지원**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

③ **서비스 사각지대 보완**과 **로컬푸드 확산**으로 농업·농촌 **안전망 확충**

④ 농산물 지원 사업을 통한 **취약계층**의 **먹거리 접근성 강화**

□ **(농촌재생 뉴딜)**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**'농촌공간계획*' 수립**으로 **종합적 농촌 재정비** 추진

◇ **농촌공간계획 :** 농촌 공간을 **용도**(주거, 산업, 축산, 에너지 등)**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획**(Zoning)하고, 특성에 맞춰 **체계적 정비·개발**하기 위한 계획 제도

⇨ 농촌의 **생활서비스** 및 **주택**, **산업 육성**, **에너지 전환** 등 **다양한 농촌 정책**을 **연계**시키는 **제도적 기반**

○ **(공간계획)** 공장·축사·신재생에너지 등 **정주환경 개선**이 **시급한 지역**에 대해 **공간계획 수립**(5개소, 2월~) 및 **근거법률** 제정 추진

○ **(생활SOC·주거)** 인구 분포·전망, 서비스 시설, 교통망 등을 고려하여 **적정 서비스**를 **공급**하고, **농촌**에 **특화**된 **주거 인프라** 확충

* 생활SOC 복합센터 목표(누계) : ('20) 693개소(누계) → ('21) 797 → ('22) 900

○ **(농촌협약)** 생활SOC, 기초인프라 등 **농촌 정주여건 개선**을 위해 정부·지자체가 **함께 투자**하는 **'농촌협약' 확대**('20: 9개소 → '21: 20)

□ **(귀농귀촌 활성화)** 지역기반 **정책, 일자리·복지 정보**까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**통합 제공**하는 **쌍방향 플랫폼 구축**(~'23)

○ 농촌 이주 전에 **최장 6개월**간 **미리 거주**하며 농작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**'농촌에서 살아보기'** 프로그램 도입(89개 시·군, 500가구, 3월~)

□ **(농업·농촌 안전망)** 사회적 농장, 농협 등을 활용하여 **농촌**의 **취약계층**에 대한 **사회안전망 강화**

○ (**사회적 농업**) 농업활동과 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·제공하는 **사회적 농장 확대**(30개소 → 60) 및 **지역단위 돌봄모델 발굴**(2개소) 추진

- 사회적농장 요건 규정, 지정제 도입 등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(9월)

○ (**로컬푸드**) **지역별 푸드플랜**을 기반으로 **로컬푸드 생산·공급체계**(조직화, 계약생산 등) 구축 지원

- **영세·고령농**의 **로컬푸드 참여 비중 확대** 및 코로나19에 대응한 **비대면 판로지원*** 강화

* 농협몰(온라인) 및 로컬푸드 직매장(오프라인)과 연계한 근거리 배송시스템 구축

○ (**고용 안전망**) 「**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로드맵**」에 따라 농업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**농업인 고용보험 적용 방안** 검토

- **농가 소득 파악**, 사업장 특정, 농업 특수성을 감안한 휴·실업 등 고용상태 정의 등 쟁점별 적용방안 구체화

□ **(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)**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농식품 바우처 등 **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사업**을 **통합**하여 **확대·개편**하는 방안 검토

○ 그동안 **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3개 사업**(과일 간식,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, 바우처) **효과 분석**(6월) 및 **통합 방안 마련**(12월)

3. 기대 효과

□ ①**농촌 생활여건 개선**, ②**사회적 경제 활성화**, ③**영세·고령농 참여 로컬푸드 확산** 등으로 농업·농촌 포용기반 강화

농촌형 생활SOC		사회적 농장		로컬푸드(정부지원 직매장) 영세·고령농 참여 비중	
'20	'21	'20	'21	'20	'21
693개소 ▸	**797**	30개소 ▸	**60**	51% ▸	**60**

5 농업·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

1. 관련 현황

□ **(농업 온실가스)** 국가 전체의 2.9% 수준인 **20.4백만톤** 배출*

* 벼재배 6.0백만톤, 가축 장내발효 4.4, 가축분뇨 4.2, 농경지 토양 5.8 등

○ **경종분야**는 논 면적 감소, 타(他)작물 재배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**감소**한 반면, **축산분야**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**배출량 증가**

* 벼 재배: ('11) 7백만톤CO_2eq → ('17) 6 / 축산: ('11) 8.4백만톤CO_2eq → ('17) 8.6

- **환경보전프로그램**('19~), **공익직불제**('20~) 등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, 주요 선진국 대비 **고투입 농업 구조**

* 질소비료 사용량(kg/ha) : **한국 133.8**, 미국 72.6, 스위스 114.8, 호주 35.1, 일본 85.6

⇨ 농업인의 환경보전 활동 참여, 축산 환경부하 저감 등 **농업 전분야** 및 **전후방**에서 환경친화적 전환을 통해 **온실가스 감축 필요**

□ **(재생에너지)** 「**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**」에 따라 **다양한 태양광 사업모델*** 추진 및 제도 정비('30년까지 농촌 태양광 10GW 목표)

* 주민참여형(마을 3개소, 염해간척지 2, 저수지 1), 영농형 11, 농업기반시설 활용 28 등

○ **수익성 저하, 외지인 주도**의 사업 추진에 따른 **농가 반대, 안전성 우려**로 태양광에너지 확산에 한계

* 농촌태양광 공급량(누적, GW) : ('18) 0.68 → ('19) 1.82 → ('20.11) 3.11

⇨ **환경 훼손 최소화, 지역주민**에게 **수익 귀속** 등을 기본 원칙으로 **농촌 재생에너지 확대** 및 **에너지 전환** 필요

□ **(기후변화)** 자연재해 발생은 증가했으나, **수리시설**이 **노후화***되고, 경영안정 장치인 **재해보험**은 **손해율 급증**** 등 **운용**에 **한계**

* 전체 수리시설(73천개소) 중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60% 상회

** 보험금지급액/손해율 : ('16) 1,115억원/34% → ('19) 9,090/186 → ('20) 10,193/150

⇨ **기후변화 적응 능력**을 강화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

2. 추진 계획

◇ (목표) **온실가스 발생 최소화** 및 **재생에너지 전환**으로 **농업·농촌 탄소중립**에 기여하고, **기후변화 대응 역량** 제고

① 농업 분야 **온실가스 발생**을 **최소화**하고, 농촌 지역을 에너지 전환 및 **에너지순환 공간**으로 **재구성**하여 **탄소중립 선도**

② 농업·농촌의 **기후변화 적응 능력** 및 **재해예방 기반** 강화

□ **[종합계획 마련]** 농업·농촌 분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을 담은 **「제2차 농업·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」** 수립·발표(3월)

○ **'30년**까지 4대 부문(농축산업·농촌·식품유통·산림) **온실가스 감축·흡수, 기후변화 적응**을 위한 목표와 과제 제시

* 주요과제(예시) : ①농축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 확충 ②계절성 극복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형 아열대 소득 작목 육성 ③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국 확대

□ **[배출 저감]** 농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**축산과 벼농사를 중심**으로 **저탄소 농업 실천 지원**

○ (**축산**) **적정규모** 사육, **양질**의 **조사료** 공급 확대, **저메탄 사료** 개발·보급* 등으로 가축의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 배출 저감

* 저메탄사료 및 미생물제제 사용농가 지원 강화(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 50% 상향)

- 가축분뇨 **신재생에너지화** 및 **정화처리 비중 확대**로 온실가스 감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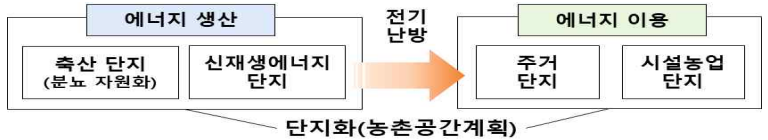
○ (**비료·농약**) **온실가스 저감 농법***을 개발·보급하고, 농가에 대한 **인센티브 지급** 방안 검토

* 논물 얕게 대기, 논 간단 관개, 지능형 정밀살포 기술 개발 등

○ (**에너지 전환**) 주요 농업시설의 'RE100'을 포함한 **「농업·농촌의 에너지 전환 계획」** 수립(12월)

-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('13.2월) 이전 생산된 **농기계**(트랙터·콤바인) **32천대 조기 폐차 지원**('21~'25)

□ **[재생에너지]** **공간계획**을 통한 축사·온실·신재생 에너지시설 등의 **단지화**로 **재생에너지 생산·이용 체계 구축**



○ **영농형 태양광** 사업주체, 입지, 허용방식, 시설기준 등을 포함한 **도입 세부기준** 마련(6월) 및 **주민 참여형 사업*** **활성화**

* 농업인 투자형 저수지 태양광 확대(1개소 → 3), 주민참여형 염해간척지 사업 추진(3월)

○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시·군(5개)에 '**재생에너지 생산·이용 효율화**' **모델 적용** 및 **컨설팅, 관련 사업*** **우선 지원** 추진

* 원예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,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등

□ **[기후변화 적응]** 농업·농촌 **재해예방** 및 **피해완충**을 위한 인프라 강화

○ (**재해 예방**) **노후 수리시설**의 **안전진단** 및 **개보수**, 저수지 **비상 수문·물넘이 확장** 등 홍수 대응 시설 강화

* 개보수 비율(총 5,842개소 대상) : ('20) 66.9% → ('21) 69.9 → ('30) 100

○ (**재해 보험**) **보험요율 개별화**(시·군 → 읍·면, 할인할증률 현실화), **보장수준 선택 다양화, 고위험군 관리 강화**로 보험의 지속가능성·합리성 제고(~'22)

3. 기대 효과

□ ①농업 분야 **온실가스 발생 저감**, ②**농촌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**, ③**농업기반시설 재해대응력 제고**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

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		농촌 태양광		수리시설 개보수	
'20	'21	'20	'21	'20	'21
6개소 ▸	**8**	3.1GW (당초 목표 : 2.3GW) ▸	**4 (당초 목표 : 2.8GW)**	3,908개소 ▸	**4,085**

Ⅳ. 2021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1. 우리 먹거리 공급 기반이 강해집니다.

주요 곡물의 자급기반 확충	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	정확한 관측으로 적정 생산 유도
▪ 밀 전문생산단지('21년 32개소) ▪ 밀/콩 비축량 확대 : '21년 10천톤/25천톤 → '25년 30/30	▪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 : '20년 14개 → '21년 16 ▪ 자조금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	▪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관측정보 제공으로 농가들의 의사결정 지원 ▪ 관측정보와 생산·유통·소비정보를 통합된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

2. 가축질병 걱정이 덜어집니다.

안전한 농장	책임성 강화	스마트한 지원 체계
▪ 농장이 갖춰야할 방역시설 기준을 법으로 제도화 ▪ 소규모 농장(50m² 이하)과 기타가축 농장도 관리 강화 ▪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는 신규 축사 입지 제한	▪ 농가 질병관리등급 평가 기준·방법 개선 ▪ 계열화사업자의 계약농가 방역관리 의무 부여	▪ 축산농가 정보 통합 관리

3. 농업의 디지털화로 성장동력을 만듭니다.

스마트 농업 활성화	온라인 유통 혁신	온라인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
▪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(4개소) ▪ 스마트팜 청년 보육생 양성(누계) : '20년 372명 → '21년 580 ▪ 청년농에게 비축농지 지원 확대 : 1인당 지원 한도 1ha → 2	▪ 온라인거래소 시범품목·참여자 확대 : 20년 양파, 마늘, 사과 → 21년 주요 채소과수 ▪ 화훼 온라인경매시스템 도입	▪ 글로벌 대형 온라인몰 한국식품관 : '20년 1곳 → '21년 5 ▪ 농식품 온라인 수출기업 육성(100개)

4. 농업·농촌의 포용성이 더욱 커집니다.

농촌재생 뉴딜 착수	준비된 귀농귀촌	농업·농촌 안전망 강화
▪ 농촌공간계획 시범사업(5개 시군) ▪ 농촌협약 20개 시군 추진 및 농촌생활SOC 797개소 조성	▪ 농촌살아보기(신규, 500가구) ▪ 귀농귀촌 지원 정책, 일자리·복지 서비스 정보 등을 원스톱 제공	▪ 사회적농장 확대 : 30개소 → 60 ▪ 마을 단위 사회적 농장 시범모델(2개소) ▪ 지역 단위 통합돌봄 시범모델(2개소)
로컬푸드로 중소·고령농 배려	**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강화**	
▪ 중소·고령농 참여비중 확대 : '20년 51% → '21년 60	▪ 농식품 바우처 : 18천가구 → 28 ▪ 임산부 꾸러미 : 62개 시군구 → 138	

5. 농업·농촌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섭니다.

저탄소 생산구조	에너지 전환	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
▪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: 6개 → 8 ▪ 사료내 미생물 제제 사용농가 지원 강화 ▪ 노후 농기계 3,200대 조기 폐차	▪ 농촌 태양광 : 3.1GW → 4↑ ▪ 수상태양광 등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하여 91MW 발전시설 건설	▪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: 전체 수리시설의 66.9% → 69.9

붙임1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

국정과제		추진현황	'21년 계획
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	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	ㅇ 보육·교육·문화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대(365생활권 누계 1,311개소) ㅇ 노후슬레이트 철거·개량(7,178동) 및 빈집 정비(7,519동)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ㅇ 지역활력 증진 및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('20년 누계 60개소 조성)	ㅇ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협약 연계 통합형 지역개발 추진 ㅇ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지원 확대 * ('21) 누적 381개소 → ('22) 451 ㅇ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지구 확대(누적 80개소)
	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	ㅇ 농촌형교통모델 이용 확대 * ('19) 149개소 → ('20) 153 ㅇ 농지연금 확대* ('19) 14,492건 → ('20) 17,015 ㅇ 농촌유학센터 우수기관 선정(7개소) ㅇ 여성친환경 농기계 개발(드론방제기, 인삼 파종기, 들깨 정선기 등 5종)	ㅇ 농촌형교통모델 이용 확대(320만명) ㅇ 농지연금 가입 확대 * ('21) 20,100건 → ('22) 23,700 ㅇ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제도 도입('22)
	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	ㅇ 생산·가공·관광 등을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및 지구 육성 * 인증사업자 1,909개소, 융복합산업지구 28개소 ㅇ 농촌관광 품질관리 및 현장중심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(27개소) ㅇ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체험상품 발굴·확산(683개소) 및 정책자금 조건완화 ㅇ 사회적경제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지원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(서울 7월, 전북 11월)	ㅇ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('21~'25) 수립시행 ㅇ 로컬푸드·공공급식 연계 6차산업 제품 소비 활성화 추진('22) ㅇ 농촌관광 온라인플랫폼 개편 등 우수자원 정보제공('22) ㅇ 사회적농장 확대('22. 70)
	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(산림청)	ㅇ 경제림조성을 위한 조림(23천ha), 숲가꾸기(217천ha) 사업실행 및 임도신설(684km) ㅇ 목재산업단지 조성 * 제천('18~'20년), 춘천('20~'22) ㅇ 산림분야 사회적경제조직(98개) 확대 및 수목진료 전문가(1,006명) 등 일자리 창출	ㅇ 지역 산림자원 활용 주민사업체 중심 일자리창출 * 주민사업체 발굴·육성 11개 ㅇ 스마트 산림탄소관리 시스템 구축('22)
	숲을 국민 쉼터로 재창조 (산림청)	ㅇ 산림복지시설 확충('19 786개소 → '20 834) 및 산림복지이용권 발급확대('19 35천명 → '20 40) ㅇ 도시민 안정적 산촌정착 지원 근거 법률 마련 *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	ㅇ 산림복지통합플랫폼 구축 ㅇ 임업경영과 산림서비스를 함께하는 산림복합문화원 제도 도입
82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	쌀 수급 안정	ㅇ 논타작물 재배로 쌀 생산면적 조정(2.2만ha) ㅇ 국제기구를 통해 중동·아프리카 등 6개국에 우리쌀 원조(5.3만톤) ㅇ 쌀 수급안정제도 도입으로 정책수단 체계화 * 양곡관리법 개정, '20.1월 ㅇ 코로나19 대응, 국제곡물수급상황반 운영('20.4~), 식량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및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ㅇ 쌀 가공식품 수출액 증가(27%)	ㅇ 논 타작물재배 안정적 정착(지자체 중심) ㅇ 쌀가루 전용 품종개발·보급 ㅇ 밭작물 신품종, 기계화 등 신기술 보급('22) ㅇ 사료용 벼 품종 개발·보급('22)

국정과제		추진현황	’21년 계획
	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 및 개편	ㅇ 공익직불제 시행방안 확정(’20.2월),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(’20.4월) ㅇ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로 신청서 확인 절차 간소화(4개 중앙부처, 1개 유관기관) ㅇ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 소득 안정 및 논·밭 형평성 제고 * 중소농(0.5ha이하)/ 밭 수령액 비중(%) : (’19)10.6/ 16.2 → (’20) 22.4/ 28.3	ㅇ ’21년 공익직불제 사업 준비·시행 철저 * 공익직불제 시스템 개선(2월), 이행점검(3분기) 등 ㅇ 농업환경프로그램 개선 등 사업고도화 추진 * 실천프로그램 발굴 및 난이도 계층화(20개소)
	농어업 관련 재해 대응 강화	ㅇ 재해보험금(208천 농가, 1조 267억원) 및 재해복구비(194천 농가, 2,682억원) 지원 ㅇ 농작물재해보험(’19년 38.9% → ’20: 45.2) 및 농업인안전보험(’19: 64.8 → ’20: 66.7) 가입률 증가 ㅇ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(62개→67) 및 사업지역(참다래·단호박) 확대 ㅇ 코로나19 대응, 재해대책 경영자금 신규지원(308억원), 특별재난지역 농업인에게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(1.5%→0)	ㅇ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다양화, 요율 합리화 등 제도개선사항 이행 ㅇ 농업인안전보험 보장확대 및 홍보 강화 ㅇ 농업분야 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* 기준단가 적용기준 적정성 검토·보완
	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	ㅇ 농업관측을 실측조사(5대채소 중심)로 전환(’20.1월) ㅇ 농수산자조금법 개정(’20.5월), 노지채소(양파·마늘) 의무자조금 출범(’20.7월) ㅇ 비대면 온라인거래시스템 도입(’20.5)으로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 ㅇ 코로나19 대응, 농축산물 할인쿠폰 발행(20%, 최대1만원), 화훼농가 등 긴급자금 지원* * 화훼도매시장 출하선도금 금리인하(1.5%→1.0) 중도매인 등 임대료 인하(50%)	ㅇ 의무자조금 확대(2개) ㅇ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ㅇ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방안 마련 ㅇ 비대면 도매유통 활성화 * 온라인거래소 품목 확대 및 축산물 온라인경매플랫폼 구축 ㅇ 코로나19 대응, 농축산물 할인쿠폰 발행
83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	후계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	ㅇ 청년 창업농 1,600명 선발(누적 4,800명) ㅇ 농고·농대생 농업계 학교 실습 및 스마트 팜 등 첨단 실습시설* 지원 *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: (’19) 8개교(농고4, 농대4) → (’20) 21(농고15, 농대6) ㅇ 청년층의 귀농 및 귀촌인의 농산업분야 유입 촉진을 위한 청년귀농 장기교육 및 귀촌인 농산업 창업지원 확대 * 청년귀농 장기교육 : (’19)100명/808백만원 → (’20)150/1,205 (50명, 397백만원 증)	ㅇ 신규 청년창업농 1,800명 선발 * (누적) 6,600명 ㅇ 농고·농대생 등 미래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실습 교육 강화(100개소) ㅇ 귀농귀촌 희망자의 지역 밀착형 체험 프로그램(농촌에서 살아보기) 도입·추진(3월 예정)

국정과제		추진현황	’21년 계획
	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	ㅇ 친환경농업지구 확대(’19: 47 → ’20: 65), 친환경 산지유통조직 육성(’20까지 7개소) ㅇ 친환경인증품 판매지원 등을 위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(’20.2월) ㅇ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3,629호(누계) ㅇ ASF·AI 등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농장 시설기준 강화(’20.9월)	ㅇ 친환경농업지구 18개소 지정(~’22: 100) 및 산지유통조직 육성(~’22: 9) ㅇ 동물복지축산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 ㅇ 깨끗한 축산농장 4,000호 ㅇ 한국형 구제역백신 제조시설 건립 추진(~’22)
	기술 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	ㅇ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지역 및 2차 지역 착공(’19.12, ’20.9) * 1차 선정(김제, 상주), 2차 선정(고흥, 밀양) ㅇ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추진(208명 선발, ’19.9~ 교육운영) ㅇ 스마트팜 데모온실 구축·운영 지원사업 참여 컨소시엄 선정 완료 * 카자흐스탄 4월, 베트남 11월 ㅇ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년 시행계획 수립(’20.4월)	ㅇ 스마트팜 보급 지속 확대 * (누적) 온실 6,263ha, 축산 4,350호 ㅇ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* 1차(上), 2차(下) ㅇ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4기 교육생 선발 ㅇ 카자흐스탄 베트남 스마트팜 데모온실 완공 ㅇ 종자기업 대상 디지털 육종 전환 지원(20억)
	건강하고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	ㅇ 비대면판로 및 홍보, 물류비 지원 강화로 수출 활성화(’20년 수출 75.7억불, 7.7%↑) ㅇ 올바른 농약안전사용 문화 정착으로 농산물 부적합률(1.2%) 하락(전년동기 0.2%↓) ㅇ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(’20.1월) ㅇ 농식품바우처 도입(’20.9~) ㅇ 한식및한식산업진흥법 제정시행(’20.8) ㅇ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개선을 위해 국민참여 유도, ‘안심식당’ 지정(22,555개소)	ㅇ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 추진 * (’22 누적) 100개소, ㅇ 농식품바우처 사범 지원 확대 * 9개지역, 28천가구, 12개월 ㅇ 전국단위 식생활교육 추진 * 17개 광역, 15개 기초지자체 ㅇ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ㅇ 온라인비대면 수출지원 강화, 신남방 등 시장개척 확대
	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농정 추진	ㅇ 농업회의소 교육·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* 신규 회의소 설립 지원(5개소), 지자체 조례 제정(3개소) ㅇ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추진방안 마련, 농민단체 의견수렴 및 협의회 개최(총 3회, ’20. 9월, 12월) ㅇ 농촌공간계획 실증연구 착수 회의 개최(9.21.)	ㅇ 농특위 본회의 분기별 개최(연 총 4회 이상) ㅇ 농업회의소 모니터링 ㅇ 농어업회의소법 입법 추진 ㅇ 농촌공간계획-지역농발계획 연계 검토
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(환경부 주관)	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	ㅇ 「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」 수립(’20.1.15) ㅇ 등록대상동물 확대 관련 「동물보호법」 시행령 시행(’20.3.21) ㅇ 유기동물 보호수준 제고 위한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확대(’19년 5개소→’20년 9개소) ㅇ 농식품부 동물보호·복지 전담조직(동물복지정책과) 정규조직화(’20.2.25)	ㅇ 「동물보호법」 전부개정 위한 연구용역 실시 ㅇ 동물판매 전 동물등록 신청 의무화 관련 「동물보호법」 시행 ㅇ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호여건 실태조사

붙임2 4년간 성과/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

≪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≫

○ 강원도 평창에서 **혼자 1,500평 밭농업**(고추, 깨, 옥수수)을 하는 **고령 농업인 A씨(80세)**는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**수확이 부진**하여 금년도 농사 준비에 걱정이 컸으나, **처음 도입된 기본형 직불금 120만원**을 **수령**하여 **농자재 구입** 등 금년도 **농사 준비에 큰 보탬**이 되었다.

* 0.1~0.5ha이하 소농 수령 직불금 비중 : 개편 전 10.6% → 개편 후 22.4%

○ **친환경으로** 가지와 오이 등을 키우는 B씨는 코로나19로 등교 대신 원격 수업을 하는 학교가 늘면서, **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납품 물량이 대폭 감소**하여 농산물을 폐기 처분해야할 처지였다. 마침, 농식품부와 교육부가 **'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'**으로 폐기 위기에 있던 농산물의 **판로를 해소**해 주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담을 덜 수 있었다.

○ **파프리카**를 재배하는 농업인 C씨는 **'19년 말** 중국 수출을 위한 **검역조건이 합의**되어 중국 수출을 크게 기대했다. 그러나, **코로나19 상황**으로 중국검역관의 **현지 검역이 불가능**하게 되면서 수출이 연기되었다. 다행히 우리 **정부**에서 **중국측과 적극적으로 협의**해 현지검역을 **영상검역으로 대체**하면서 **11월 수출길**이 열렸다. 일본에 편중된 파프리카 **수출시장이 다변화**된 만큼 수출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.

≪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≫

○ 귀촌을 고민하던 직장인 D씨는 대전에서 30분 떨어진 **농촌마을**에 **주택을 매입해 정착**했다. 지난해 우연히 '**농촌에서살아보기**' **프로그램**을 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. 지금 마을에서 **6개월간 생활**하면서 **주민들과 친분**도 쌓고, **작은 텃밭**에서 **농사**도 지어보니 **듣던 것보다 농촌 생활이 만족**스러워 용기를 낸 것이다. 최근에는 이 마을이 '**농촌공간계획**' **시범대상**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니, **앞으로 생활여건이 더 좋아질 것** 같아 귀촌하길 잘했다고 생각 중이다.

○ **밀 재배농가** E씨는 요즘 기대가 크다. 지난해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**밀 산업 육성 대책**으로 우리밀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. 정부에서 **생산단지로 지정**받아 **순도높은 종자 공급에서부터 재배관리·수확까지**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계획이다. 품질 좋은 우리밀 생산을 통해 **먹거리 자급률 향상에도 기여**할 수 있을 것이다.

○ 김제시 출신으로 서울 소재 대학에서 **컴퓨터공학**을 **전공**한 F씨는 평소에 **스타트업에 관심**이 컸으나, **초기 투자비용 마련**이 **어려워 고민**이 컸다. 그러던 중 고향 집 근처 **스마트팜 혁신밸리**를 보고 스마트 농업에 관심이 생겨 **보육생에 지원**, **스마트팜 전문교육**을 **이수**하고, 현재는 **임대형 스마트팜**에서 컨설팅을 받으며 **창업을 준비** 중이다.